

새만금공항 뜨기 전에 군공항 이전·광주공항 통합 서둘러야

무안공항 살아나려면

무안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광주·전남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이 무안공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도 더해서 전국 국제공항 7곳 가운데 광주공항과 5, 6위를 다투는데 그칠 정도로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적 편익에 새만금공항이 들어서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위상 자체도 크게 흔들릴 위기에 있다. 광주·전남이 군공항 이전 절차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지켜 추진하면서 광주·전남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시설, 연계, 편의, 관광 등 전반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공항, 광주·전남이 합쳐도 경쟁력 미지수=무안공항은 인천·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양양 등과 함께 우리나라 8개 국제공항 중 하나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2018년 운영편수는 3818편, 여객수는 54만3000명이다. 2017년 2146편, 29만8000명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8곳 가운데 강원도 양양공항(342편, 3만7000명)에만 앞섰다. 김포·제주·김해는 고사하고 대구공항(2만6800편, 406만2000명), 충주공항(1만5683편, 245만3000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무안공항의 이 같은 미약한 실적은 광주·울산·여수·포항·군산·사천·원주공항 등 7개 국내공항 중 1위인 광주공항의 1만3546편, 198만6000명을 그대로 흡수한다고 가정해도 변하기 어렵다. 대전·충남·충북이 총력 지원하는 5위 충주공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전북이 새만금공항을 추진하는 등 호남권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는데다 무안공항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민간공항 통합은 필연, 전남도 무안공

개항 11년 전남도 활성화 대책 미흡...광주공항 합쳐도 전국 6위 광주·전남 공동 이전팀 구성, 주민 설득하고 정부 지원 끌어내야

항 활성화 계획 '미흡'=광주·전남·전북에 한 무안국제공항 1곳, 광주·여수·군산 등 국내공항 3곳, 소규모 흑산공항 1곳 등이 운영되거나 추진중이다. 여기에 새만금공항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중요변수로 부상했다. 인구규모와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공항이 산재돼 있는 것이다. 무안공항이 개항하면서 광주공항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은 당연했던 선택이었다. 하지만 통합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무안공항 경쟁력은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항 11년이 넘어섰지만 눈에 띄는 시설 투자도 없었다. 정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9조2000억원을 전국 공항에 투자하지만, 무안과 광주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도는 수년째 354억원을 들여 무안공항 활주로(2800m)를 400m 연장하고, 수하물 처리시스템인 케로셀 증설(46억원), 통합관사 신축(76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활성화 계획을 추진중이다. 또 정기노선 버스 확대, 공항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 내용 역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광주를 비롯한 주변 도시와의 연계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에 대해서도 광주·전남이 총력 지원하는 5위 충주공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전북이 새만금공항을 추진하는 등 호남권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는데다 무안공항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민간공항 통합은 필연, 전남도 무안공

이전 건의(지자체장)-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장관)-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이전 후보지 선정(선정위원회)-주민투표·유치신청(지자체장)-이전 부지 선정(선정위원회) 등 6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구는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4단계), 수원에는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3단계)를 마친 반면, 광주는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2단계)를 마쳐 가장 늦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서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만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의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전남도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광주시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군공항 이전 없는 민간공항 이전 역시 제대로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대책팀을 구성해 무안군과 군민 등 이전후보지 설득에 나서고, 정부의 무안공항 투자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군공항 건설, 이전지 지원, 금융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자체와 협의해 국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신공항 15.3㎢ 건설 4조791억원, 이전지 지원사업 4508억원, 종전 부지(8.2㎢) 개발 8356억원, 금융비용 3825억원 등 5조7480억원을 투입해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까지 주민투표·유치신청(지자체), 이전부지 선정(국방부)까지 마쳐야 가능한 계획이다. 하지만 설사 주민투표 단계까지 가더라도 쉽게 찬성으로 여론을 이끌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이전대상지를 설득하고 국방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야만 현 정세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며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기보다 호남권, 더 나아가 영남권, 충청권의 수요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무안공항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평화·번영의 신한반도체제 주도적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회담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라며 "북미 두 정상은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남북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가 두 정상을 성원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 경제의 시대로 나아가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 한미동맹,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며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본궤도...전남도·나주시 지원단 구성·한전 TF 구성 속도

이달 상견례·내달 실시협약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한전 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25일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조직 구성을 위해 과장급 지원단장 1명을 비롯해 팀장급 3명, 행정·시설(토목·건축)·도시계획·분야 담당자 6명 등 총 10명을 발령 냈다.

한전공대설립지원단 규모는 총괄기획·기획협력·개발지원 등 3개 팀에 나주시의 행정지원팀을 더해 총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날 꾸려진 설립지원단을 당

장 시급한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우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오는 4월께 정식 개편을 통해 인원을 추가로 확충하고 정식 직제 조직인 '과(課)' 급으로 격상 시킬 방침이다. 나주시도 행정지원팀 업무를 지원할 5명을 전남도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에 파견키로 결정하고, 이달 중 우선 팀장급(5급 사무관) 1명을 비롯해 4명을 지원단에 먼저 합류 시킬 계획이다.

한전공대설립지원단은 전남도가 총괄업무와 건축·토목·시설 분야를 맡고, 나주시가 행정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구성에 따라 한전 측의 '한전공대 설립지원

TF'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 내 공대설립지원단의 전체 인적 규모는 단장을 포함해 3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자체 설립지원단과 실무 협의에 나설 TF는 5명 수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설립지원단 인적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한전 측과 첫 상견례를 갖고 한전공대 입지 실시협약을 위한 실시 협의에 들어간다. 공대 부지 제공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3월 상반기 중에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협약에는 부지제공 조건과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인·허가 추진계획, 행정지원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공

개되지 않은 전남도의 한전공대 부지제공 조건과 지원계획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전 측은 실시협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교·교과 체계 등을 정리한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한다. 마스터플랜은 올해 상반기 중에 완성할 계획이다. 최종 용역 보고서에는 '학교·교과 체계', '캠퍼스 건축 방향' 등이 포함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애초 계획대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 2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돼야 상반기 내에 캠퍼스 착공이 가능하다"면서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을 통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호 소 문

존경하는 목포시 시장님! 목포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목포시 공무원님께 호소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를 위해 법에서 정하는 원칙부터 준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의 입찰은 행정편의 주의적 판단을 버리고

지역경제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전기공사법에서 정한대로 반드시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

- 1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의 입찰방법은 우리 지역에 소재한 전문 중소기업들에게 입찰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 2 전기공사는 전기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3 목포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분리발주 제도를 무시하는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검토될 만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산업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 5 목포시는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의 중소 전문 전기공사기업을 외면하고 920억 원이 넘는 공사를 건설대기업만 참여 가능토록 통합발주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려합니다.
- 6 지역경제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중소 전기공사기업 가족 모두는 월기대회를 열어 너무나 애타고 현실을 호소하고자합니다.
 - 일시: 2019. 3. 7(목) 14시 ·장소: 목포시청 정문 앞

2019. 2. 26.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회원 및 가족 일동